



[734호] 3면, 1974년 4월 25일자 3면에는 4년 대역사를 마무리한 의협회관 낙성식을 담았다. [1000호] 4면, 1976년 11월 18일자. [醫協新報] 지령 1000호 특집호. 의사면허·전문의면허 1000호 대담. [1035호] 3면, 1977년 3월 21일자. [醫協新報] 창간 10주년 특집호. "그 후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특집. [1306호] 3면, 1979년 11월 1일자.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애도 담화문을 실었다. [1513호] 3면, 1981년 11월 2일 의협 공제회 출범을 맞아 '공제회 가입하여 안심하고 진료하자' 캠페인 전개. [1576호] 5면, 1982년 6월 10일자. 보사부의 목포 처방·조제에 관한 지침 개정과 강제 의약품분업 시도를 담았다. [1683호] 3면, 1983년 6월 23일자. 식중독 예방 대책 세미나와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계몽 교육을 진행했다. [1865호] 4면, 1985년 3월 28일 [醫協新報] 창간 18주년 기념식 및 제1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 개최. [2000호] 3면, 1986년 7월 17일자. [醫協新報] 지령 2000호 김진호 회백의 의거대행과 기획 특집. [2071호] 3면, 1987년 3월 26일 [醫協新報] 창간 20주년 기념식과 제3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 [2107호] 3면, 1987년 7월 30일자. 태풍 셀마 수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 순회 진료와 수재의연금 모금 운동.



[2270호] 5면, 1988년 2월 24일 의협은 임시 총회를 열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철폐'를 요구했다. [2666호] 27면, 1993년 1월부터 남 할 자 편집에서 화상(CTS) 편집 조판 체제 전환. 신년특집호 72면 제작. [2910호] 3면, 1995년 6월 1일자로 '대한의학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의협 명칭 개정 정관 허가. [3000호] 1면, 1996년 4월 18일자. 지령 3000호. '임상병리검사 분야 최근 진전'을 다뤘다. [3098호] 1면, 1997년 3월 20일자. 창간 30주년 기념특집. '한국 의학의 참영들', '의료보험 20년 앞으로의 과제'. [3194호] 1998년 3월 23일자. 창간 31주년 전면 가로쓰기 도입, 세로 제호에서 가로 제호로 바뀌었다. [3290호] 3면, 1999년 3월 8일자. 의약분업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3297호] 1면, 1999년 4월 1일자. 외부 제작에서 자체 제작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3366호] 3면, 1999년 12월 2일자. 11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법의례 결의대회. [3397호] 1면, 2000년 2월 21일자. 2000년 2월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 의사대회'. [3418호] 1면, 2000년 6월 8일자. 6월 4일 과천에서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 전국 의사 결의대회'.



[3422호] 1면, 2000년 6월 22일자. 근로 조합으로. 전국교수가 6월 20일부터 폐업 투쟁에 돌입했다. [3443호] 1면, 2000년 9월 4일자. 보리매공원서 국민건강권 수호 의사·학생 대동하마당·의료개혁 원년 선포식. [3450호] 1면, 2000년 10월 2일부터 1면 광고 대신 기사 지면 전환. 의약계 전문신문 편집 관행 탈피. [3557호] 1면, 2001년 10월 22일자. 10월 20일 열린 의협 첫 비상선진 회장 당선 소식을 실었다. [3629호] 1면, 2002년 7월 8일자. 7월 6일 개소한 정책 산실 의료정책연구소 출범을 알렸다. [3779호] 1면, 2004년 1월 1일자 한문 [醫協新報] 제호를 한글 [의협신문]으로 변경. [3884호] 1면, 2005년 1월 13일 의협·병원, 긴급의료지원단 동남아 쓰나미 의료지원단 파견. [3902호] 16면, 2005년 3월 21일 인터넷 의협신문 (KMATimes) 창간. [3962호] 1면, 2005년 10월 20일자. 10월 14일 대한의사협회 긴급의료지원단 파견사건 관련. [3970호] 1면, 2005년 11월 14일자. 의협신문 전지면 컬러화 도입. [4000호] 30면, 2006년 3월 6일자. [의협신문] 지령 4000호 기념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보건의료계 현안 진단·공론 형성·대응방안 제시

1면에서 이어집니다

1966년 제18차 광주 대의원 총회
'의협주보 발행안' 정관 개정안 통과

의협 내부에서 의협의 주장을 정당하게 알리고, 의료계 안팎의 외국인 정책과 주장으로부터 의협과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지를 창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했다.

의협은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1963~1964년)을 역임한 17대 박주형 회장 집행을 중심으로 창간 계획을 수립, 1966년 4월 17일 열린 제1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의협주보 발행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광주 총회에서는

명주와 서울시사회장의 제18대 의협 회장 당선과 정관 개정에 의해 처음 대의원 총회 의장제 시행에 따라 이면재 의장(부산)을 선출한 것을 계기로 갑론을박 끝에 '의협주보 발행안' 결의를 이끌어냈으로써 기관지 창간의 근거를 마련했다.

창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서울시의사회 내부에서 [醫協新聞] 공동 운영과 통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것. 두 차례 임시총회, 전체의사회, 5차에 걸친 11인협의회, 3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 협상이 10개월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기관지 통합을 위한 협상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됐다.

의협은 기관지 인가 조건인 자체 인쇄시설을 확보하고, 의협 회관(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44-5)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법적 제반사항을 갖춘 끝에 1967년 3월 9일 공보부에 주 2회 발간 특수주간신문 발간등록(등록번호 다-184호)을 마무리했다. 3월 10일 명주완 대한의학회회장, 김사달 공보간행이사 등 임원진과 신문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현판식을 열었다.

대한의학회회 기관지 [醫協新報]
1967년 3월 21일 창간호 발행

1967년 3월 21일. 의협 기관지 [醫協新報]는 의권옹호·의도양양·의료문화발

전·의정쇄신을 사시로, 창발발취·책임완수·신속정확·인화단결을 사훈으로 내걸고 창간호를 발행했다.

창간호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술보국', 이회상 국회의장의 '수도준화' 등 축하 휘호와 박목월 시인의 '난초를 생각한다' 축시를 게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단체인 대한의학회회의 위상에 걸맞는 [醫協新報]의 창간에 세계 보건의료계 수장과 정관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겼다.

[醫協新報]는 전국 각지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울리게 하기 위해 지사 및 지국을 확장했다. 1967년 6월 7일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 의사회장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6월 22일에는 전국 160



[의협신문] 제작과정은 우리나라 신문제작 발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초창기에는 문선(남한자 체자)-정판(판짜기)-제판(사진·제책·동판 제작)-윤전(인쇄) 과정을 거쳐 신문을 발간했으나, 이후 기술의 발달로 인쇄지 제판에 이어 화상조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1999년 4월부터 편집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 인쇄를 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곳 시군구의사회장을 지국장으로 선임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췄다.

창간 초기 특수주간신문 등록 조건이던 인쇄시설을 갖추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문선·정판·제판·윤전에 이르는 제작업무

전반을 운용하기에는 인력·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랐다. 마침 관계 당국에서 신문발간 지침을 기관지 성격의 신문발행은 인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변경함에 따라 신아일보사(서울 중구 정동 소재)에서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지령 2호부터 39호(1967년 8월 3일자)까지는 산업경제신문사에서, 40호부터 1991년 10월까지 현대경제일보사(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1999년 3월까지 경향신문사에서 외부 제작에 의존했다. 1999년 4월부터는 인쇄를 제외한 신문 제작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

언론사 사전 검열·기관지 통폐합 위기
의료계 입장 대변·전문언론 자리매김

[醫協新報]는 창간 초기 광고 배정을 주도한 제약사 광고실무책임자 모임인

'PR구락부'의 비합조와 기존 전문지의 견제 속에 독자 경영에 시달렸다. 1972년과 1980년 정권 변화기의 언론사 사전 검열과 기관지 통폐합 위기도 겪어야 했다.

경영과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醫協新報]는 기획과 특집 기사를 통해 선진국 의료제도와 학술적 진전을 소개하며 꾸준히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일원화·의료전달체계·의료분장·의료보험·의약분업 등 의료계에 불어닥친 난제와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도 도맡았다.

정부·국회·유관단체는 물론 각 대학병원과 시도·시·군·자치단체를 주요 출입처로 정해 보건·의약계 현안을 진단,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론을 형성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醫協新報]는 창간 초기 광고 배정을 주도한 제약사 광고실무책임자 모임인